선진경제실 / 일본동아시아팀

[일본] 코로나19 관련 동향

2020. 4. 9

1. 확산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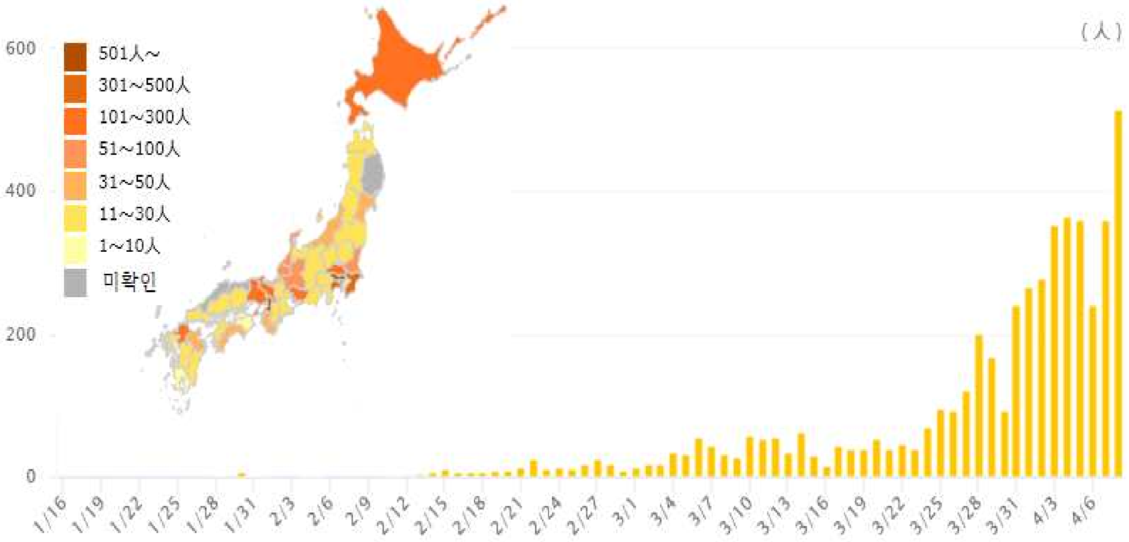
□ 일본은 2020년 1월 15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4월 9일(오전 10:30 기준)까지 총 5,691명의 감염자와 116명의 사망자 발생

○ 국내 감염자는 4,979명(사망 105명), 그 중 우한발 전세기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14명이며,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·승무원 중 감염자는 712명(사망 11명)으로 집계

○ 지역별로는 도쿄도(1,338명), 오사카부(524명), 카나가와현(356명), 치바현(324명), 아이치현(280명), 사이타마현(250명), 효고현(248명), 홋카이도(208)명 등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

- 긴급사태선언이 발효된 4월 7일 다음날인 4월 8일 전국에서 50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, 이는 하루에 확인된 감염자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임.
- 4월 9일 도쿄 내 신규 확진자수는 181명으로 일일 기준 최대치임.

<그림 1>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(4월 9일 오전 10:30)



자료: https://www3.nhk.or.jp/news/special/coronavirus/data/(검색일: 2020. 4. 9).

2. 경제적 영향

□ 일본에서는 실업(해고), 소비 및 산업생산 감소, 기업 도산 등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

○ (**실업**) 일본 도심을 중심으로 택시 사업을 영위하는 로열 리무진 그룹은 6개 계열사 종업원 중 약 60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(4개 계열사는 해고 통보 완료)1)

- 로열 리무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, 긴급사태선언으로 향후 더욱 영업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,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

○ (**소비**) 일본종합연구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약 90%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, 이로 인해 인바운드 소비2)가 3.6조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(GDP 0.7% 하락)3)

- 일본정부관광국(JNTO)의 '방일외국인관광객수' 통계에 의하면, 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,085,100명으로 전월대비 59.22% 감소

○ (**산업생산**) 도요타·닛산 등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8개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부품 조달 차질 및 자동차 수요 감소 등에 직면하게 되어 일본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4)

-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월 초순까지 생산중지 계획을 발표

○ (**기업 도산**) 4월 8일 기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, 파산 등 법적절차에 돌입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기업은 약 42곳이며, 이 중 관광 관련 기업은 18곳, 외식 관련 기업이 13곳으로 전체의 약 70%를 차지5)

<그림 2>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

주 : 월별 데이터이며, 2020년 1,2월은 2020년 2월 데이터의 연간 환산 수치임.
자료: 日本政府観光局(JNTO)

3. 정부의 대응

□ 아베 총리는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

○ 4월 7일 아베 총리는 수도권 등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,

---

1) 「新型コロナで業績悪化 タクシー会社が約600人解雇へ 東京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4. 8).
2)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를 의미
3)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(2020. 4. 9), 「インバウンド需要蒸発、20年度は9割減」, p 1.
4) 「自動車各社 工場停止も従業員の雇用は維持の方針 新型コロナ」, 「 NHK NEWS WEB」, (2020. 4. 8).
5) 「新型コロナ関連の倒産42社 7割は観光・飲食関連企業」, 「 NHK NEWS WEB」, (2020. 4. 8).

도쿄도·카나가와현·사이타마현·치바현·오사카부·효고현·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(5월 6일까지)[6)]

○ 긴급사태선언이 발효된 지역의 지자체장은 외출 자제·휴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소유자의 동의 없는 개인 재산(주택, 토지)의 강제 사용·의약품 및 식품의 매도 요청이 가능

○ 한편 다이와종합연구소(大和総研)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소비 감소액이 1개월간 약 1.4조엔(도쿄에서는 0.4조엔 정도)에 이를 것으로 추산[7)]

–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외식·숙박 관련 지출이 90% 정도 감소하고, 문화·오락 관련 지출은 절반 정도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함.

– 긴급사태선언이 5월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, 2020년 전체 소비 감소액은 약 7.6조엔 정도가 될 전망이며, 실질 GDP는 약 24.4조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(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-4.5%)

* 단, 위의 분석은 코로나19가 6월경 종식되는 것을 전제로 함.

□ 일본 정부는 4월 7일 약 108조엔 규모의 대규모 긴급경제대책을 발표[8)]

○ 일본 정부가 발표한 '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'은 ①감염 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, ②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, ③ 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 회복, ④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, ⑤ 향후 예비비 편성 등으로 구성

– **(감염방지 및 의료제공)** 마스크·소독액 공급량 확보, 코로나 검사체제 강화 및 환자 조기 발견[9)], 약 5만개 이상의 추가 병상 확보, 4월 안에 의료용 마스크 1,500만장 추가 보급, 온라인·전화 진료(원격진료) 활용, 아비간[10)] 200만 명분 비축, 귀국자에 대한 검사 체제 강화 등

– **(고용유지 및 사업지속)**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률 인상[11)], 지속적인 중소 및 영세 사업자의 사업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(대출 금리의 실질적 무이자),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실질적 무이자·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비,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30만 엔의 현금 지급 실시[12)], 아동수당 지급세대에게 대상 아동 1인당 기존(1만 2천엔)보다 1만엔 초과지급(임시특별급부금) 등

---

6) 「安倍首相が緊急事態宣言　7都府県対象　効力5月6日まで」, NHK NEWS WEB」, (2020. 4. 7).
7) 大和総研(2020. 4. 8), 「緊急事態宣言・緊急経済対策後の日本経済見通し~2020年の実質GDP成長率は短期収束でも▲4.5%の見込み：日本」, pp 2-3.
8) 内閣府(2020. 4. 7), 「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」について」.
9) 환자 조기발견 대책은 집단감염의 특정 및 이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, 환자 상태 악화 방지 등으로 구성
10) 2016년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
11) 긴급대응기간(2020년 4월 1일~ 6월 30일)에 고용조정조성금의 중소기업, 대기업에 대한 조성률(지급률)을 각각 4/5, 2/3로 인상하고,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9/10, 대기업은 3/4로 함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동 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
12) 2020.2~6월 기간 중 세대주의 월간 수입이 ①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개인주민세균등할 비과세수준이 되는 저소득세대, ②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감소하고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개인주민세균등할 비과세수준의 2배 이하가 되는 세대 등임.

– **(경제활동 회복)**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, 큰 타격을 받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규모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를 환기하고, 일본경제를 다시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대책 강구13)

– **(강인한 경제구조 구축)** 기업의 공급망 재구축 지원(유턴기업 지원), 의약품 국내제조거점 정비 지원, 대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대체 및 사용량 절감,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신속·유연한 공급망 대체 등

– **(향후 예비비 편성)** 코로나19 상황 및 경제 동향을 감안, 필요한 대책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, 지금까지 대책을 상회하는 규모의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(가칭)'를 설정

<표 1>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책

일시	내용
1월 24일	– 외무성은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을 두 번째로 강한 '레벨 3(여행 중지 권고)'으로 격상
1월 30일	**– 내각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범정부 대책본부 설치(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」)**
1월 31일	– 외무성은 중국 전역의 감염 위험 정보를 '레벨 2(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)'로 격상하고,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거부를 발표
2월 1일	– 코로나19를 '지정감염증'으로 지정하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 * 조치 시행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입원을 권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,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원도 가능 * 2003년 사스, 2013년 H7N9형 조류독감, 2014년 메르스 등이 '지정감염증'으로 지정되었으며, 이번이 5번째 지정
2월 13일	**– 정부 긴급대책 (제1탄) 발표(153억 엔 규모)** * 긴급대책은 ① 귀국자에 대한 지원(30억 엔) ② 국내 감염 대책 강화(65억 엔) ③ 미즈기와 대책 강화(34억 엔) ④ 피해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(6억 엔) ⑤ 국제 협력 강화 등(18억 엔)으로 구성
	– 중국 저장성 온주시의 감염 위험 정보를 후베이성과 동일한 '레벨 3'으로 격상하고 저장성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시행
2월 25일	– 「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방침」을 발표
2월 26일	– 2주 동안 대규모 이벤트의 중단 혹은 연기를 권고
2월 27일	– 전국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3월 2일~봄까지 임시 휴교 요청
3월 4일	– <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>의 개정안의 발표: 특별조치법의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추가
3월 5일	– 한국, 중국인의 일본 입국 시 2주간 강제격리조치 실시 결정(3월 9일자 발효)
3월 9일	–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결정
3월 10일	**– 정부 긴급대책(제2탄) 발표(약 2조엔 규모)** * ① 감염확대방지 및 의료제공체제의 정비(486억 엔), ② 학교의 임시휴업 및 이에 따른 대응(2,463억 엔), ③사업활동의 축소 및 고용 대응 (1,192억 엔), ④ 사태 변화에 대응한 긴급조치(168억 엔), ⑤ 금융조치(1.6조 엔) – '긴급사태선언'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결정(13일에 가결) (총리가 지자체에 외출자제, 휴교 등의 요청/지시를 할 수 있는 법안)
	– 이벤트, 모임 등 개최 자제 요청(2월 26일)을 10일 연장
3월 16일	– 일본은행이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**금융 완화 조치**를 발표

13) 일례로 관광·운수업·외식업·이벤트 사업의 경우 'Go To 캠페인(가칭)'을 실시, 캠페인 기간 중 여행상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방문한 소비자 등에게 할인 쿠폰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임.

일시	내용
	* ETF·REIT 매입 확대, 금융기관에 최장 1년간 금리 0%로 대출하는 조치 신설, CP 및 회사채 매입 규모 확대 등
	– 일본은행, 미 연준, 유럽중앙은행(ECB), 캐나다중앙은행, 영란은행, 스위스 중앙은행의 6개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 내리고 당초 1주일 단위였던 공급 기간 외 3개월 만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기로 합의(미국시간 15일에 발표)
	– 외무성은 스위스의 티치노주, 이탈리아 북부의 3개 주 및 스페인 일부지역 및 아이슬란드를 ‘레벨 3’ 지역으로 격상하고,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 등 유럽 24개국을 ‘레벨 2’로, 영국 및 아일랜드를 ‘레벨 1(주의 환기)’로 지정
3월 18일	**–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추가적인 긴급 조치(「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」를 발표** * ① 개인긴급소액자금(소득지원, 상한 20만 엔) ②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유예 ③ 국세·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④ 지방세 징수 유예 등 포함
	– 외무성은 전 세계를 감염 위험 정보 ‘레벨 1’로 지정
3월 19일	– 정부·여당 및 일본은행은 4월에 발표할 예정인 긴급대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
3월 22일	–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이 생활자금으로 최대 20만엔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특례조치를 결정
	– 외무성은 미국 전역을 감염 위험 정보 ‘레벨 2’로 격상, 불필요한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
3월 23일	– 외무성은 이란 전역 및 유럽 18개 국가를 ‘여행금지권고’ 수준인 감염 위험 정보 ‘레벨 3’으로 격상
	– 내각부 산하에 약 50인 규모의 ‘코로나19대책추진실’을 설치 * 후생노동성, 총무성 등에서도 합류하여 기존보다 약 2배의 규모로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침.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, 이 추진실은 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예정
3월 24일	**–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**
	– 도쿄도지사가 도시 봉쇄 가능성을 언급
	– 문부과학성이 ‘학교재개 가이드라인’을 책정 * ① 출석정지 및 차별방지, ② 원활한 학습 진행, ③ 학교재개 체크리스트, ④ 임시휴교 가이드라인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
3월 25일	– 미국발 일본 입국자도 3월 26일 0시부터 2주간 격리조치 실시 – 외무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 (전 세계를 여행 자제 대상으로 한 것은 최초임.)
3월 26일	– 1월 30일 설치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<코로나19 특별조치법>에 근거한 내각 산하 조직으로 변경 * 이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에 현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계획 – ‘고용조정조성금’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, 여당이 검토에 착수
3월 28일	– <특별조치법>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 등을 담은 「코로나19 대책의 기본적인 대처방침(基本的対処方針)」을 발표
	– 아베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 시 재정 규모를 웃도는 규모의 경제 대책 및 이를 위한 2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하여 10일 즈음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
4월 1일	– 외무성은 한국, 미국, 중국 등 49개 지역을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(입국거부 대상 지역: 총 73개)
4월 7일	**– 도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**
	– 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(총액 108조 엔 규모)’를 발표 * ①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(2.5조엔), ②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(80조엔), ③ 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의 회복(8.5조엔), ④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(15.7조엔), ⑤ 향후 예비비(1.5조엔) 등

자료: 각종 언론, 정부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